

울산 조선업 인력부족 해소 추진 우즈벱 현지 맞춤 기술인재 육성

고용부·울산시, 외국인력 직접 양성 훈련 통해 숙련도 높여 즉시 투입
올해 280명 울산 중소 조선사 배치
산업 맞춤 교육 모델, 제조업도 확대

조선업계 업·직종별 특화 인력 수요에 대응해 우즈벱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 인재를 양성, 울산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3월부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 주도로 우즈벱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 과정을 거친 인력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이뤄진다.

훈련 과정은 보은, 사상, 발판, 도장, 전기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 훈련 규모는 약 28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올해 7월~12월까지 입국할 예정이다.

훈련 비용과 운영 전반은 울산시가 지원하고, 훈련 내용은 지역 내 기업 수요를 직접 반영해 편성된다. 고용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는 훈련 수료자가 울산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알선한다.

우즈벱스탄 정부도 훈련 시설 이용, 훈련 기자재 반입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송출 절차를 신속 진행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향후 현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력모델을 비롯해 입국 전후에 걸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교육훈련을 체계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는 우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수요가 있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이다. 아울러 산업계 주도로 현장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참여할 기업을 모집토록하는 한편, 외국인력 우선 알선, 고용제도 상향, 재입국 특례 등을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의 훈련 참여 유인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기업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이 선발되고, 이후 숙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선발 및 훈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나라살림 소폭 개선... 11.5조 흑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3월호
1월 긴 설연휴에 총지출 감소

올해 1월 말까지 나라살림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영향으로 영업 일수가 줄면서 총지출이 많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 원 규모 흑자를 나타냈다. 1월 누계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3번째 사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영업일 감소로 총지출이 감소한 데다 통상적으로 1월은 지난해 4분기의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흑자가 났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전년보다 3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가 늘었기 때문에 흑자 폭은 큰 편"이라고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

을 나타낸다.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3조2000억 원 줄어든 5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진도율(7.8%)은 2014년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설 연휴 등으로 영업일이 전년보다 나흘 적은 18일로 집계됐기 때문에 총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속집행 노력으로 '일평균 총지출'을 집계해 봤을 때는 전년동기(2조5000억 원)대비 늘어난 2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업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일 기준으로 평균 지출액은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13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000억 원 줄어든 66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4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7000억 원 늘었고 부가세는 8000억 원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필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충남 당진 소재 저수지 방문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빙기를 맞아 농업용 저수지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송 장관은 13일 충남 당진 소재 농업용 저수지인 전대저수지를 방문해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의 점검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시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월17일~4월 2일 기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 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송미령(앞줄 왼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충남 당진을 찾아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붕괴, 전도(시설물·공사현장) 및 산사태(사면·급경사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이 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의 주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외 공사현장, 청사, 온실, 창고, 관리사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수원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

이산화탄소 90% 이상 포집 성공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피에이에프씨(PAFC) 연료전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수원은 지난 12일 전남 광양에서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시연회'를 개최하고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연료전지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지난 2023년 3월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탄소중립항만 전략에 부합하는 여수광양항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탄소포집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2023년 9월 한수원 주관으로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설계 변경), 에어레인(분리막 포집 기술), 한국종합기술(설치공사)이 공동으로 참여해 시작됐고, 오는 5월까지 20개월 간 진행된다.

작년 12월 여수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에 연료전지(1대) 및 분리막 포집설비(1대)를 설치했고, 지난 1월엔 각 설비들의 시운전을 완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맞춤형 바우처 본격 가동

산업부-코트라
수출바우처 611억으로 확대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응해 대체시장 발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바우처'도 4월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래자'를 개최하고 올해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 대상 1대 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 애로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수출바우처(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으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원 규모는 611억원으로 전년(561억원) 대비 9%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전년 1100여개사에서 올해 1300여개사로 늘린다. 이번에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으며 4월부터는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을 가지고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커지고 있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바우처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합심해 원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도 "수출 초보기업부터 성장 기업까지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도 ESG 필수 대응

환경산업기술원

온실가스 배출 기준 마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14일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스코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스코프1(기업이 소유 및 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2(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3(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사회·투

명경영(ESG)'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 요소이다.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과 각국 공시의 국제적인 표준이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포함돼 있어 사전 준비가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 등은 기업들이 스코프3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업종과 함께 업종별 안내서를 발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는 지난해(2024년) 발간한 이차전지 업종 안내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세종=김연세 기자